

● 대학 내 산학협력단·학교
기업 설립가능

대학 내에 산학협력사업을 전담하는 법인격의 산학협력단을 설치하고, 교육과정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학교기업을 설립·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의 다양한 산학연 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교육진흥법중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 취득 및 사용과 기술 이전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격의 '산학협력단'을 총·학장 소속 하부 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며,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산업 인력을 교육하는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 기업과 학교간 인력·시설의 교류와 공동 활용 촉진을 위해 대학 안에 기업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등을 설치·운영하는 '협력연구소' 제도도 도입된다.

특히 2004년 3월 1일부터 '학교기업' 제도가 도입되어,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관련 상품을 기존 실험·실습 시설에서 제조, 수선,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학교기업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학들은 산학협력단이나 학교기업 등이 경제활동을

을 통해 거두는 수익을 별도 회계로 처리, 대학 발전에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법 시행을 위해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학교기업' 제도를 위한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도 제정할 계획이다.

● 이공계 우수대학생 장학금
신청 저조

이공계 대학의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이공계 우수대학생 장학금' 신청자가 목표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대학 이공계열 신입생 중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학생들의 장학금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자가 829명에 그침에 따라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자는 수도권 16개 대학 522명, 비수도권 26개 대학 307명으로 수시모집 선발 예정 인원(포항공대, KAIST 포함) 683명을 더해도 1,512명에 불과하며, 당초 3,500여명을 선발, 194억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에 크게 못 미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에 따라 신청자격에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대학의 경우 고교 전학년 수학·과학 평균석차가 각

각 30% 이내이고 수능 자연계열 수리·과학탐구 영역 중 한 영역이 1등급이고 다른 영역이 2등급 이내인 신입생으로 완화하였다. 또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 고교 전학년 수학·과학 평균석차가 각각 30% 이내이고 수능 수리·과학탐구 영역이 각각 3등급 이내인 신입생으로 확대하였다. 기존 신청자격은 고교 내신 수학·과학 평균석차가 상위 20%이고 수능 수리·과학탐구 영역이 모두 1등급(수도권)인 경우와 2등급(비수도권)인 경우였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원래 각 대학의 과거 신입생 성적을 토대로 신청자격을 정했으나 기준이 너무 높았던 것 같다."며, "기준 완화로 신청자가 많아져 한 학교 지원 한도(20억 원)를 넘을 때는 10%(2억 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 여성 과학자 채용 확대

국·공립 대학 이공계 학과와 국책연구기관 등은 2006년까지 신규 채용 인력의 15%를, 2010년까지는 20%를, 2011년 이후에는 30%를 여성 과학자로 뽑아야 한다. 현재 25개 정부출연 연구소를 대상으로 시행하여 온 여성 채용 목표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권오갑 과학기술부 차관은

“160여 개 국·공립 이공계 대학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에 상정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여성 채용 목표제를 새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66개 국·공립 연구기관과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원 등 8개 정부투자기관 연구소는 이를 즉시 시행한다. 권차관은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과학 기술인력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이 저조하여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며 “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별도 정원을 인정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또 여성 교수 신규 채용 비율이 높은 국·공립 이공계 대학에 연구비가 우선 지원된다. 이번에 여성 채용 목표제가 도입되는 74개 기관의 경우 전체 연구원 4,789명 가운데 여성은 14.1%(677명)를 차지하고 있다.

● 정책자문위원 인터넷 공모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정책 자문기구인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외부 기관 및 내부 추천, 홈페이지(www.moe.go.kr) 추천을 통하여 공모한다고 밝혔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교육기획재정, 교육과정, 교원정책, 인적자원 개발, 평생직

업교육, 대학교육, 지방교육, 국제교육정보화 등 8개 분과와 총괄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에는 10~12명의 위원을 둔다.

위원회 위원 구성은 여성 비율을 최대 50%, 지방 인사를 최대 40%까지 반영하여 구성할 계획이며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은 교육·인적자원 개발 기본정책 수립과 장·단기 교육 계획 수립, 교육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자문을 하는 명예직이다.

● 대학 담장 헐고 녹지조성 추진

서울시내 대학의 담장을 헐고 주변에 녹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교 담장 개방 녹화 사업’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시내 59개 대학 가운데 지난 해 담장을 개방한 중앙대에 이어 내년까지 고려대와 연세대, 명지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등 6개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고려대에 대해서는 설계용역비 9,500만 원을 성북구에 지원하고 추경예산에 사업비 19억 원을 반영하는 한편, 연세대 등 5개 대학에 대해서는 시가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맡고 내년 예산에 50억 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벌일 계획

이다.

서울시는 이어 나머지 52개 대학 가운데 담장 개방이 가능한 15개 대학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3년간 매년 5개교씩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에 위치한 대학 담장을 헐고 부족한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삭막한 도시 경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방대학 육성에 500억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지방 소재 30개 4년제 대학(산업대 포함)에 지방대 육성사업비 500억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별로 신청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26개 대학(일반 대학 110개, 산업대 16개, 지방 캠퍼스 7곳 포함)이며, 대학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하여 선정, 대학별로 5억~20억 원을 차등 지원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중부(강원, 대전, 충북, 충남), 남부(광주, 전북, 전남, 제주), 동부(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3개 권역에 각 49개(38.9%), 32개(25.4%), 45개(35.7%) 대학을 각각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 일정은 대학이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6월 중 1차 서면 평

가를 통해 50여 개 대학을 선정된 뒤 6월 말 현장방문 평가를 거쳐 7월 중 30여 개 대학을 최종 선정, 국고 지원이 완료된다. 평가 항목은 사업 목표의 타당성(15점), 사업 계획의 합리성(15점), 재원 조달 능력(10점), 경쟁력 강화 기여 정도(30점), 지역사회 기여 정도(10점), 지방 학생 유인 효과(20점) 등 총 100점 만점이며, 교육인적자원부 행·재정지원 재재 대상에 포함된 대학은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다.

● **대학 구조조정, 국립대 법인화 정책 연구 수행**

교육정책 방향의 기초가 될 정책과제가 확정되어 연구자 공모에 들어갔다. 올해 확정된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는 모두 27개로 고등교육 관련 과제 9건도 포함되었다.

특히 ▲고등교육 재구조화 및 질 제고 방안(조정 1과)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사례(대학 행정지원과) ▲사립전문대학 경영 분석 모형(전문대학지원과) 등 3개 과제는 사례 분석을 통한 고등교육기관의 구조조정과 국립대 법인화, 사립전문대 재정 건전화 유도 정책 시행을 위한 기초 연구가 된다는 점에서 연구자 선정에 벌써부터 대학가의 시선이 쏠리

고 있다. 확정된 정책 연구 과제는 또 ▲경영전문대학원 도입 방안(대학 행정지원과) ▲대학원 교육 질 제고 방안(대학학술학사과) ▲대학교육의 국제화·선진화 방안(대학행정지원과) 등 고등교육 질 관리와 체제 변화에 영향을 끼칠 주요 과제도 포함되었다.

● **‘대학무역실무사업단 대학’에 10개 대학 선정**

경성대, 건국대 충주캠퍼스 등 10개 대학이 산업자원부 주관 대학무역실무사업단 대학에 선정되었다. 산업자원부는 5월 6일 참여 대학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참여 희망 대학의 대응 투자 금액 규모와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서울과 제주도를 제외한 8개 광역지자체 별 1개 대학을 선정하고, 나머지는 지자체별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10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자원부는 지방 대학생들에게 무역현장 경험 습득 등을 통해 무역 전문인력을 조기에 양성하는 ‘대학무역실무사업단(Trade Incubator) 대학’의 금년 제3기 사업부터는 사업 규모를 기존 10개 대학 350명에서 20개 대학 700명으로 확대기로 하였다.

※ 선정 대학 : 중앙대 안성캠퍼스(경기·인천), 관동대학교(강원), 건국대 충주캠퍼스(충북), 대전대·한남대(대전·충남), 계명대(대구·경북), 경성대·경산대(부산·울산·경남), 호원대(전북), 광주여대(광주·전남)

● **이공계 대학 연구소 활성화 대책 범정부기구 구성**

정부는 이공계 대학 부설연구소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연구소 활성화 대책기획단’을 구성하여 가동기로 했다. 정부는 정부중앙청사에서 14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윤덕홍 교육부총리 주재로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어 이공계 대학 연구소 활성화 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가 단장이 되는 대책기획단은 올 10월까지 대학연구소 기능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교육·연구·산업체 연계 강화 방안 등이 공계 대학연구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또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국가기술자격이 산업 현장과 교육 훈련 사이의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

격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 하였다.

● 2004학년도 대학 정원

자율 결정

2004학년도부터 일정 기준을 갖춘 대학들은 학생 정원을 교육 인적자원부의 사전 조정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학년도부터 대학 학생 정원 사전 조정 절차를 없애고 대학들이 정원을 자율적 결정 기준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원 자율조정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전문대학 포함)들은 2004학년도 정원 자율적 결정 기준인 ▲교원·교사 확보율 각각 90% 이상 확보 ▲수익용 기본 재산·교지 확보율 각각 55% 이상(전문대학 각각 40% 이상) 확보를 충족하면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대학 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 증원 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정한 뒤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해 왔다.

또한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2004학년도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정하던 지역별, 규모별 증원 규모, 미충원을 과대 대학 증원 여부, 학과 조정 원칙 등도 폐지하여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정원 자율적 결정 후 교육 여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정원 자율화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재정지원 배제 등 행정·재정적 조치를 강력히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공립 대학, 수도권 소재 대학, 사범계 및 보건·의료 분야의 학생 정원은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종전처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4학년도 전국 국·공립대학과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은 지방 소재 대학의 대규모 미충원 등을 고려하여 동결키로 했으며, 다만 수도권 사립 대학의 경우 사범계 및 보건·의료 분야 이외의 분야는 총정원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정원의 변경·조정은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간강사 처우 개선 추진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 시간강사에 고정적 월급을 주고, 각종 보험 혜택도 받게 하는 등 정규직처럼 대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해묵은 과제인 시간강사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데다, 노무현 대통

령의 대선공약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하지만 비용 조달과 사립대학의 반발이 걸림돌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한 후 올해 안에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 수도권 접경지역 4년제 대학 허용

이르면 금년 9월부터 수도권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신축 및 매입이 금지된다. 또 낙후된 수도권 접경지역에는 4년제 대학 신설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 협의에 들어갔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하여 파주, 포천, 연천, 동두천, 양주, 고양, 김포 일부 등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제 대학 신설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 2003년도 노인전문가

양성 기관 선정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도 노인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지원대학(전국 16개 대학 : 전문대 4개

포함)을 선정·발표하였다. 선정 대학에서는 평생교육원 등에 '노인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교육 수요 충족과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 관련 시설·단체 종사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재교육 기회 제공 및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게 된다. 총 교육 시간은 90시간으로 8월 중순부터 3~4개월 동안 진행되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 선정 대학: 이화여대(서울), 경북대(대구), 동의대(부산), 인하대(인천), 전남대(광주), 대전보건대(대전), 가톨릭대(경기), 강릉영동대(강원), 청주과학대(충북), 천안대(충남), 목포대·순천청암대(전남), 대구대(경북), 창원대(경남), 제주대(제주) 등

● 국립대 여교수 2백 명 채용

국립대가 올해 증원할 교수 정원 1천 명 중 2백 명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정한 여교수 채용 정원으로 책정되어 여성 교수 채용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4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여성 교수가 정원의 20% 미만인 학과·학부에 대한 여성 교수 충원 계획을 제출받아 이중 27개 대학에 대해 1~31명씩 별도의

여교수 채용 정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향후 3년간 여성 교수 채용 확대를 희망하는 학과나 학부에 필요한 별도 여성 교수 정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청년무역인력 양성사업

참여학생 선발

산업자원부는 청년무역인력 양성사업 제5기 참여 학생 40명에 대한 선발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선발된 대학 및 대학원생들은 두 달간 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에서 무역 계약, 수출입 대금 결제, 해외 바이어 발굴 등 실무 교육을 받은 뒤 9월부터 4개월간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현지 시장 분석, 바이어 상담, 세일즈 등의 경험을 쌓게 된다.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진취적이고 벤처 정신을 갖춘 청년 인재를 전문 무역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추진된 이 사업은, 2000년부터 247명이 과정을 수료하였고, 취업 학생의 83%가 무역업계로 진출하였다.

● 2003년 RRC 선정

과학기술부는 6월 16일 ▲부경대(부산) 친환경 첨단 에너지기계 연구센터 ▲경산대(경북) 한방생명자원 연구센터 ▲건국대(충북)

바이오 식·의약 연구센터 ▲한남대(대전) 민·군 겸용 보안공학 연구센터 ▲동신대(전남) 산업용 가속기 연구센터 등 5개 연구센터를 RRC로 신규 선정하였다.

RRC 사업은 지방 대학의 우수한 연구자원과 지역 중점육성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 지방 대학의 연구 활성화 촉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 인력의 양성·공급을 목표로 1995년 시작되었으며, 각 RRC는 지방자치단체·산업체와 함께 해당 지역의 중점육성산업에 핵심이 되는 기초·응용 연구를 수행한다.

● 특성화 우수대학 300억원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이 지역 실정과 자체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하는 특성화 계획 및 실적을 평가, 30여개 우수 대학을 선정해 지난해 보다 120억원이 증가한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성화 우수대학 신청서를 제출한 121개 공·사립대학에 대해 서면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한 뒤 7월말까지 30개 정도를 선정, 학교당 10억원 내외로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 방법은 일반대와 산업대를 구분하고, 일반대는 학생수에 따라

1만명 이상 대규모, 5천~1만명, 5천명 이하 소규모 대학으로 구분해 여건이 비슷한 대학끼리 나눠 평가한다.

● 우수 이공계 대학생 장학금 168억원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을 통해 이공계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중 우수학생 2798명과 수시모집을 통한 입학자 957명 등 3755명에게 168억 여원을 들여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교 내신과 수능의 수리 및 과학탐구 성적 등에 따라 65개 대학이 추천한 신입생 가운데 선발된 이들은 학교가 정한 일정 성적을 유지하면 4년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방대 우수 신입생 중 수능 수리와 과학탐구 영역이 모두 1등급인 학생에게는 교재비 등으로 매월 20만원, 2등급인 학생은 매월 10만원을 주는 등 29개 대학 838명에게 11억 2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 수립 계획

법정부 차원의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합동기획단'이 공식 구성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개 부처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오는 12월까지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합동기획단(단장 정기연 교육부 차관보)에는 교육부·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노동부·산업자원부·여성부·중앙인사위원회·국정홍보처 등 8개 부처의 국장과 함께 경제단체·언론기관·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 생명공학 등 6대 전략분야 국립대 교수 300명 증원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22개 국립대에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 등 6대 국가전략분야와 의학 치의학 분야 교수 정원 300명을 새로 배정했다고 밝혔

다. 이는 국가전략분야 교수 증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1년 마련된 '국가전략분야 인력양성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증원된 정원은 6대 국가전략분야 165명과 의학 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 대학 교수 135명이다.

● 중국전문가 2만여명 키운다

내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5년간 이공계열과 사회계열 출신 학사·석사·박사급 중국전문가 2만 2000명을 양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중 박사학위 이상 500명은 지역별·분야별 '고도(高度)의 중국 전문가'로, 학사급 2만명과 석사급 1500명은 '일반 중국 전문가'로 각각 양성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중국 전문가 양성 계획'을 마련, 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